

한국 청년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 비교적 관점에서 본 청년 문제

김용재 대외협력 담당관
한중일 3 국협력사무국

1. 100 년 만에 돌아온 화두, '청년'

바야흐로 '청년'이란 단어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것도 정치적 해결책을 요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말이다. 이제는 누구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2007 년 우석훈 박사의 『88 만원 세대』가 처음 출간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직면한 상황은 본인들에게도, 사회적으로도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도리어 "눈물에 젖은 짜장면의 맛"을 모르는 철없는 세대라는 따가운 눈초리와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위로의 글을 접하며 각자도생할 따름이었다.

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기여한 것은 각종 선거였다. 젊은이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선심성 공약, 혹은 포퓰리즘이라는 혹평 속에서도 '청년 수당'을 포함한 각종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관심의 대상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노인에 이어 또 하나의 생애주기가 사회적 합의와 정책을 필요로 하는 과제로 인식된 셈이다.

사실 청년이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드문 일은 아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니 말이다. 허나 이 단어가 단순한 세대간 차이를 넘어서 심각한 정치적 이슈로 다뤄진 것은 그 유래를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그동안 한국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품어왔던 의미는 대체로 희망적인 것이었기에 '문제', '대책'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과의 결합은 더욱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문학비평용어사전에 따르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의미를 내포하게 된 것은 대체로 1910 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 젊은이, 특히 젊은 남성을 뜻하는 이 용어는 『신문계』, 『청춘』, 『학지광』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으며,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극심한 위기에 봉착한 1910 년대 한국 사회에서 크게 각광을 받았다. 즉, 청년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역동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이며, 불확실한 미래를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하는 열정과 불안의 상징으로서 기대감을 내포하는 개념이었던 셈이다. (문학비평용어사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1. 30., 국학자료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속한 세대가 실로 100 년만에 주요한 화두에 복귀했다는 사실이 반갑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이 문제가 단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정치지도자들이 널리 지혜를 모으고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대신 선부른 정책들을 제시하고 예산을 집행하기에 급급한 현실에서 기인하는 답답함이 크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청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비교의 관점에서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공시적 잣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 대의 청년 해법을 바탕으로 통시적 접근을 병행함으로써 21 세기 한국의 현실과 15 세기 세종의 정치 사이에 교량을 놓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청년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의 단초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한국 '청년 문제'의 구조적 원인

오늘날 청년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서부터 출발한다. 학벌이 나쁘거나 집안이 어려운 이들은 물론이고, 소위 'in Seoul'의 명문대를 졸업한 젊은이들조차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경제위기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일상으로 자리잡아 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금년 3 월 청년층(15-29 세) 실업자는 52 만명을 돌파했으며, 지난 2 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12%를 넘어선 바 있다. 또한 국내 30 대 그룹의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4% 이상 줄어들 것으로 집계되면서 실업난이 장기화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실업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나 급여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소위 3 포 세대, 5 포 세대와 같은 신조어에서 드러나듯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한 사회의 다음 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는 것, 그 여파는 단순히 청춘의 낭만이 사라지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구조와 경제양상의 변화를 야기하기 마련이다.

관련 논의들을 들여다 보면 적지 않은 주장들이 청년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 바 '온실 속 화초론'이 그것이다. 요지인

즉슨, 과거보다 삶의 여건이 훨씬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진 오늘날 청년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3D 업종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피 현상, 군대 내 자살사건 등과 결부되어서 예전보다 여러모로 풍요로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 세대가 편안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청년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다른 한 편에서는 IMF 이후 한국을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와 최근 지구촌이 직면한 저성장 기조가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최장집 교수에 따르면, 오늘날 청년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운영 원리(시장 경쟁과 효율성의 가치, 민영화, 탈규제, 노동시장 유연화 우선시)와 세계화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가해진 충격이 청년 세대에게 직격탄으로 돌아가면서 야기되었다고 한다. 또한 세계 경제가 뉴노멀, 혹은 신창타이(新常態)라고 불리는 중저성장의 늪으로 들어가면서 청년 문제 해결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대침체 또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에도아르도 캄파넬라는 2009 년 7660 만명을 기록한 16-24 세 사이의 청년 실업자 수가 2014 년에도 7300 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아직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국제노동기구 ILO 통계).

상술한 주장들은 청년 문제의 단면들을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인들만으로는 청년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해결책을 찾기도 어려울 따름이다. 마치 만연한 편두통을 두고 스트레스와 미세먼지에서 원인을 찾는 것처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원인들을 지목한 셈이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노령화, 중국의 발전, 그리고 4 차산업혁명에 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그 자체로 정부의 대응을 요하는 문제인 동시에, 그 대응들이 청년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먼저 노령화 문제를 살펴보자. 한국의 노령화는 빠른 진행 속도 때문에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미 2000 년 이후 노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30 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65 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예정이다. 노령화의 여파는 베이비붐 세대(1955 년부터 1963 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체감되기 시작하고 있다. 각종 연금의 고갈을 걱정하는 분석들부터,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 노인 일자리 발굴 등이 빠른 속도로 행정 현장에서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70 세 노인으로 분장한 로버트 드 니로가 인턴으로 취직해서 활약상을 보인 '인턴' 같은 영화는 무척 낭만적으로 느껴지지만 현실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새로운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은퇴했을 세대가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청년 세대의 취업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파이 조각을 늘릴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조삼모사를 반복해서는 두 문제 모두 악화되거나 세대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에 무게추가 기운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언하긴 어렵지만 아래 표에서 잘 드러나듯,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유권자 연령구조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짐작해볼 수 있다. 2030 세대 유권자는 150 만명이 줄어드는 와중에 5060 세대 유권자는 600 만명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당들이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은 선거전략상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세대별 유권자 수 변화 추이, 이내영·정한울, 2013

	총 유권자 수	20 대 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이상
16 대 대선	34,991,529 100%	8,117,803 23.2%	8,782,623 25.1%	7,837,878 22.4%	4,513,778 12.9%	5,703,456 16.3%
17 대 대선	37,653,518 100%	7,907,239 21.1%	8,585,002 22.8%	8,472,042 22.5%	5,836,295 15.5%	6,852,940 18.2%
18 대 대선	40,507,842 100%	7,250,904 17.9%	8,101,568 20.0%	8,830,710 21.8%	7,777,506 19.2%	8,547,155 21.1%
18 대-16 대	+5,516,313	-866,899 -5.3%	-681,054 -5.1%	+992,831 -0.6	+3,263,727 6.3%	+2,843,698 4.8%

두 번째 원인은 중국의 산업 발전에 따라서 추동된 한국의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이다. 여기서도 강조점은 속도에 있다. 변화의 방향성과 종착점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그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기에 문제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산업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뉴스는 다들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한국 조선, 해운 산업이 궁지로 몰릴 줄은 정부도 기업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행히도 이 두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은 백색 가전, 휴대폰,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경고등이 켜지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런저런 논란 속에서도 정부가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수십만 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던 산업분야들이 일시에 무너져버릴 경우 여타 분야에도 연쇄적인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기고용 인력들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점이다. 즉, 위기 상황에서 비숙련 신규 인력을 채용할 기업은 많지 않기에 급격한 변화를 미처 예상치 못하고 고용시장에 들어선 청년 세대들은 진퇴양난에 처할 수밖에 없다.

우리보다 앞서 산업구조 조정을 겪은 선진국들이나 구미의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 구조조정 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직업군에 종사하던 이들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차세대를 위한 직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수반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013 년 파산을 신청했다가 극적으로 부활을 선언한 미국 디트로이트 시의 구조조정 과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고민 없이 단편적으로 산업구조조정에 임할 경우 청년 문제는 지금은 양호한 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4 차산업혁명과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화이다. 숙련기술을 우대하는 글로벌화와 새로운 기술이 실제 세계와 디지털 세계, 생물학적 세계를 융합하면서 인류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는 4 차산업혁명은 틀에 갇힌 교육제도에서 고용시장에서 자라나는 청년 세대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제기한 4 차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은 아직 낯설지만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포스트 휴먼 시대의 도래는 얼마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미래학자들은 A.I.의 등장이 기술과 숙련도의 가치를 변화시킴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절반 이상이 향후 10 년 안에 사라질 것이며, 20 억 개 이상의 일자리가 소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오늘날 젊은이들은 버스 차장을 본 적이 없듯, 미래에는 용접공, 버스기사, 조립기술자, 경리, 미화원, 심지어 경찰까지도 역사책 속의 직업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규모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이미 적지 않은 직종이 사라지거나 기계로 대체됨에 따라 고용인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에 따른 충격파는 기존의 교육체계를 충실히 따라서 성장해온 청년 세대에게 고스란히 가해지고 있다.

물론 미래학자들의 주장은 19 세기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의 경우처럼 과도한 우려일 수 있다. 사라지는 직업만큼 다양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등장하리란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전환의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국가 단위의 현실에서는 변화에 대한 적응속도에 따라 도태되는 국가와 발돋움하는 국가가 나뉘지게 된다.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청년 세대가 무너진다면 그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수밖에 없다.

3. 일본, 중국 VS 한국의 청년 문제와 정책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청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가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청년 실업은 선진국과 개도국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으로 전 세계 15 세에서 29 세 사이 인구 18 억명 가운데 1/3 가량이 사실상의 실업 상태(구직 포기자 포함)에 놓여있다고 하니 한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 아니냐는 반문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연도별 변화추이와 각국 정부에 대응 정책을 살펴보게 되면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주변국들과는 달리 한국의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경험을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다른 여러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청년 문제에서도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잃어버린 10 년이라고 불리는 90 년대 초반 버블경제 붕괴 이후부터 만성화된 청년 문제에 봉착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한 끝에 2003 년 이후부터는 종합적인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긴 바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일본 정부는 일종의 정책 실패를 통하여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경제 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이를 실행에 옮길 정치적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세개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아베노믹스가 강행되고, 대학의 정원 감축과 커리큘럼 개혁도 전국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노력은 사실상 완전 고용을 의미하는 96.7%를 상회하는 청년 취업률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이 장기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하지만, 이른바 '1 억총활약 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청년 문제와 고령자 고용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청년 문제는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노령화나 산업구조 조정이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은 편이지만 고도 성장의 기세가 꺾이면서

해마다 공급되는 청년 구직인구를 소화해내지 못하면서 청년 실업율이 1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7% 경제성장률을 지켜야 한다는 '바오치(保七)'가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로 걸리고, 지방에서 개최되는 취업 박람회에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최고지도자들이 연이어 방문하는 모습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조선 수요 및 해운 환적물량을 흡수해감에 따라 한국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해마다 1500 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고용시장에 새로이 등장하기에 이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과도한 제조업 비중으로 인한 역설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공장은 대졸자보다 고졸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대졸자의 1/3 은 29 세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 정부의 과감한 대응이다. 중국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한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미루는 대신 석탄 산업과 같은 한계 산업에서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통하여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창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각종 세제 혜택과 산학간 인큐베이터 설립, 창업실패를 겪은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재기 지원은 실리콘밸리의 기업가 정신이 중국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2013 년 한 해에만 7000 명에 달하는 중국 청년들이 직접 창업에 나섰으며,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하는 300 여개 기업은 1000 억 위안의 기금을 조성해서 80, 90 년대 생 젊은이 1 만명의 2000 개 창업아이템을 지원하는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 이러한 노력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업 자체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는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서비스산업 분야에서의 창업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연쇄적인 효과 크기 때문이다. 이용자만 해도 3 억명이 넘으며, 애플사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유명해진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滴滴出行)의 청웨이 회장은 올해 33 세에 불과하다.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은 한중일 3 국 정부가 공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히 비교해볼 가치를 갖는다. 3 국은 각각 창조경제, 대중창업 (大衆創業), 앙트레(entree)×IT 라는 기치를 제시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창조혁신센터와 같은 별도 기구까지 설립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청년들은 아래 표에서 잘 드러나듯 서로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Trade Breif 57 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5

단위: %

<진로희망>	한국	중국	일본
창업	6.1	40.8	3.8
취업	78.8	38.5	79.6
학업	15.1	20.7	16.7

<창업 장애요인>	한국	중국	일본
실패 위험 부담	38	17.8	25.3
자금 확보	22.3	1.8	11.3
창업 아이템	17.9	46.2	25.8
창업 방법 난해	11.7	13	23.1

<창업 희망업종>	한국	중국	일본
요식업	31.3	11.2	7
IT	11.7	20.1	11.8
문화/예술/스포츠	10.1	5.9	17.2

<글로벌 창업 >	한국	중국	일본
창업 시 해외진출 검토	32.4	84.6	16.7

한국 무역협회에서 작년 연말 진행한 3 국 청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창업에 대한 인식은 국가별로 상이했다. 한국에서 창업은 취업이 안 될 경우에 선택하는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주로 카페나 음식점 같은 생계형, 저부가가치 창업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주로 IT 분야를 겨냥한 혁신형 창업을 바탕으로 해외진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본은 3 국 가운데 가장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모험회피적 태도를 보였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창업에 대한 지원도 명확한 방향성과 대상 없이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만연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자금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창업을 통한 청년 문제 해결 및 개선은 요원함을 알 수 있다.

4. 세종과 청년

중국과 일본의 사례에 대한 공시적 접근은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이웃들의 경험을 통해 정답을 아닐지라도 흥미로운 참조점을 제공해주었다. 즉, 정부가 현안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바탕으로 난맥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챕터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 세종 대를 살펴봄으로써 청년 문제에 대해 통시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사실 “세종대왕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셨을까?”하는 작은 궁금증에서 출발한 분석이었으나 정치 리더십 일반에서의 교훈 정도를 기대했지, 15세기 조선에서 뚜렷한 시사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노동의 의미 자체가 다른 시대였기에 청년 문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15세기 당시 실업(失業)이라는 상황은 심각한 흉년으로 인하여 농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혹은 그로 인해 농토를 떠나 유랑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과는 그 양상이 사뭇 달랐다. 즉, 이에 대한 대책은 구휼 및 이재민 지원에 가까웠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문제는 아니었던 셈이다. 그렇지만 세종실록을 들여다보면서 청년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세종께서 대응책을 제시하셨던 기록들과 얹혀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경기 감사가 사족의 여자들 중 고아이거나 가난한 자들의 결혼 비용에 관해 아뢰다

세종실록 23 권, 세종 6년 2월 20일 병인 1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경기 감사가 계하기를,

"부모가 다 죽고, 생계가 지극히 가난한 집안에서 연령이 장성해도 시집가지 못한 의관(衣冠)한 사족의 집 딸들은, 그들의 형제와 족친으로 하여금 주혼(主婚)하게 하여, 날을 정하여 제때에 혼인하도록 재촉하고, 그 혼수 비용은, 유음 자손(有蔭子孫)에게는 쌀과 콩으로 각 2석씩 내어 주고, 그 나머지는 쌀과 콩으로 각 1석씩 내어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관노가 출산 1개월 전부터 복무를 면제케 해주라고 명하다

세종실록 50 권, 세종 12년 10월 19일 병술 6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옛적에 관가의 노비에 대하여 아이를 낳을 때에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이후에 복무하게

하였다. 이것은 아이를 버려두고 복무하면 어린 아이가 해롭게 될까봐 염려한 것이다. 일찍 1 백 일 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산기에 임박하여 복무하였다가 몸이 지치면 곧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만일 산기에 임하여 1 개월 간의 복무를 면제하여 주면 어떻겠는가. 가령 그가 속인다 할지라도 1 개월까지야 넘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상정소(詳定所)에 명하여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하라."

먼저 결혼과 출산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자. 상기의 글 두 편에서 잘 드러나듯, 액수 자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비용 문제로 결혼을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천한 신분인 노비들의 출산 전후 휴가까지도 섬세하게 제시하는 대목은 요즘 관점에서 보아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정부를 연상케 한다. 특히나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수행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임금이 이만주·임합라·심타납노 등을 힐책할 말을 아뢰라고 하다

세종실록 59 권, 세종 15 년 1 월 18 일 임신 1 번째기사 1433 년 명 선덕(宣德) 8 년

임금이 또 말하기를,

"전폐(錢幣)의 법을 역대에서 행하였으나, 돈은 저절로 행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당시의 권력과 법에 의한 뒤에야 흥행(興行)되었는데, 지금 전폐가 지극히 귀해서 속죄(贖罪)하는 자가 베[布]로 대신 바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니, 그 돈의 가치를 더하여 비싸게 바치게 하면,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무거운 것을 알아서 돈이 자연히 흥용(興用)될 것이다." 하니,

호조 판서 안순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오나, 다만 돈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한스러워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혹 돈을 녹여서 그릇을 만드는 자도 있고, 혹 왜인에게 파는 자도 있다고 하니, 경의 말이 그럴 듯하다." 하였다.

신상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중국에 들어가서 풍윤(豐潤)·옥전(玉田) 두 고을을 둘러보니, 비록 작은 고을이나 모두 시사(市肆)가 있어, 사방의 인민들이 숲처럼 모여서 가진 물건으로 없는 물건을 바꾸니, 행여인(行旅人)으로 길이 막혀서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중국은 비록 작은 고을일지라도 모두 시장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서울에서만 시장이 있고 각도의 고을에는 모두 시장이 없으니, 비록 전폐가 있을지라도 물건을 살 시장이 없으니, 도리어 돈을 못 쓰는 물건으로 생각하고 백성들이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외방의 고을에 모두 시장을 열면, 돈이 저절로 흥용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외방에 시장을 열면,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아질까 두렵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출산되는 인구는 많은데 전토가 적어서 경작할 만한 땅이 적으니, 이로써 말하면 비록 시장을 열지라도 아무런 해가 없을 듯하다." 하였다.

이 글에서 세종께서는 신상과 더불어 화폐가 널리 통용될 수 있도록 지방 각지에도 시장 개설을 허락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받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문단의 밑줄 친 부분에서 드러나는 인식의 전환이다.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놀고 먹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성리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잉여노동력에게 생업을 제공하는 기회로서 재인식하는 과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는 급격한 산업구조의 재편과 포스트 휴먼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날 한국에도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기존 사고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내는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조에서 통역할 수 있는 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고 건의하다

세종실록 42 권, 세종 10 년 12 월 9 일 병술 5 번째기사 1428 년 명 선덕(善德) 3 년

예조에서 계하기를,

"의주(義州)는 조정 사신이 왕래하는 곳이나, 역어(譯語)를 훈도(訓導)하는 법이 없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사오니, 청하옵건대 의 예에 의하여 역학 훈도(譯學訓導)를 설치하고, 본주와 인근 각 고을의 자원하는 를 모아서 한문(漢文)과 한어(漢語)를 가르쳐 그 학업을 이룬 자를 택하여 적당히 헤아려서 평양 토관(平壤土官)에 임명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역원에 체아직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 이조에서 건의하다

세종실록 42 권, 세종 10 년 12 월 20 일 정유 6 번째기사 1428 년 명 선덕(善德) 3 년

이조에서 계하기를,

"사역원의 한학(漢學)에는 전함(前銜)·권지(權知)·생도(生徒) 모두 1 백 30 인인데 체아직(遞兒職)이 7 인이요, 별학(別學)에는 13 인인데 체아직이 5 인이며, 몽학(蒙學)에는 전함·권지·생도가 모두 18 인인데 체아직이 2 인이요, 왜학(倭學)에는 전함과 생도가 모두 27 인인데 체아직이 1 인이니, 위의 제학(諸學)의 체아직의 많고 적은 것은 고르지 못하고, 또 한학과 별학은 그 학업을 익히는 것이 다른 점이 없는데도 이를 나누어 두 길로 삼고 있으니 더욱 타당하지 않습니다. 청하옵건대 이제부터 한학과 별학은 따로 체아를 주지 말고 합동 선발하여 차례로 서용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조에서 왜학의 부흥책을 건의하다

<p>세종실록 49 권, 세종 12 년 8 월 29 일 정유 2 번째기사 1430 년 명 선덕(宣德) 5 년</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지난 을미년 수교(受敎)에, '왜학(倭學)을 설치하고 외방 향교(鄕校)의 생도와 양가(良家)의 자제들로 하여금 입속(入屬)하게 하여, 사역원(司譯院)과 병합하여 몽학(蒙學)의 예에 따르라.' 하였으나, 본학(本學)은 다른 학의 예와는 달리 거센 파도와 위험한 검극(劍戟)사이를 갔다왔다하는 것이어서, 실상 꺼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입속을 구하는 자가 적사오며, 생도 30 여 명이 다만 한 체아직(遞兒職)에만 전임되기 때문에 생도들이 흔히 연고를 핑계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혹 1, 2 명이 겨우 붙어 있다 하더라도 문자(文字)를 해독하지 못하고 다만 언어만 통하고 있어, 한갓 통사(通事)를 이어대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왜서(倭書)를 역해(譯解)한다는 것도 장차 끊어지지 않을까 염려되오니, 당초의 수교대로 몽학의 예에 따라 한 체아(遞兒)를 더 주어 2 명씩 옮겨 나가도록 하여 뒷날을 권장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여진 문자를 이해하는 자를 뽑아 사역원에서 훈련시키고 통사로 임명토록 하다</p>
<p>세종실록 64 권, 세종 16 년 6 월 25 일 경오 1 번째기사 1434 년 명 선덕(宣德) 9 년</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여진(女眞) 문자(文字)를 이해하는 자가 불과 1, 2 인이어서 장차 폐절(廢絶)하게 되겠사오니, 시조인(侍朝人)207) 및 함길도의 여진인 자제 중에서 여진 문자를 이해하는 자 4, 5 일을 추려 뽑아서 사역원(司譯院)에 소속시켜 훈도(訓導)로 삼으시고, 겸하여 통사(通事)로 임명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유구국 문자를 해득하는 자를 찾아 사역원 훈도로 차임하게 하다</p>
<p>세종실록 79 권, 세종 19 년 11 월 27 일 계축 2 번째기사 1437 년 명 정통(正統) 2 년</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유구국(琉球國)에서 가끔 사신(使臣)이 오는데, 우리 나라에는 그들의 문자를 해득(解得)하는 자가 없습니다. 서울과 지방에 유구국 문자를 해득하는 자를 찾아서 사역원 훈도(司譯院訓導)로 차임(差任)하고, 왜 학생(倭學生)에게 겸해서 익히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정열적으로 정사에 임하셨던 세종 당시 많은 기관들이 분주하게 업무에 임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활발했던 기관으로서 사역원(司譯院)을 빼놓을 수 없다. 요즘으로 치면 외교통상 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였던 셈이다. 사절단 수행, 포로 송환, 그리고 무역에 이르기까지 이곳 관리들이 수행한 임무들은 세종실록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젊은이들을 뽑아서 주변국 언어에 능통한 인력으로 양성하고 이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제공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무척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조선왕조실록 전반에 걸쳐 사역원 관련 기사의 1/3 이 세종대에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때 특히 활발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내시부의 자급을 가정에 그치게 하다

세종실록 22 권, 세종 5 년 12 월 1 일 무신 1 번째기사 1423 년 명 영락(永樂) 21 년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재상[宰臣]들에게 말하기를,

"내시부의 직품이 거의 검교(檢校)이고, 녹봉은 규정을 줄였는데, 자급(資級)은 혹 자헌(資憲)까지 이르니, 이 무리들을 무엇에 쓰려고 자헌에까지 제수하는 것인가. 6 품 이하는 아울러 모두 녹봉의 규정이 없어서, 녹을 받기 위하여 나이 젊은이들을 혹은 처음에 4 품을 주는 예도 있으니, 지금부터는 6 품 이하에도 또한 녹봉의 규정을 설치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 직품으로써 녹봉을 주려고 한다."

하니, 영의정·병조 판서 이 아뢰기를,

"이 무리들이 녹봉은 비록 박하나, 자급은 높은데, 하루 사이에 내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대사헌 하연(河演)은 아뢰기를,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성상의 하교가 지당한 줄로 압니다."

하여, 이로부터 <그들의> 자급을 가정(嘉靖)에 그치게 하였다.

형조의 낭관 증원을 상의하게 하다

세종실록 50 권, 세종 12 년 10 월 19 일 병술 6 번째기사 1430 년 명 선덕(宣德) 5 년

또 김종서(金宗瑞)에게 이르기를,

"옛 제도를 고치는 것이 비록 옳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역대로 대를 이어 받는 임금이 그 시대의 적의성을 참작하여 없애기도 하고 새로 설치하기도 하는 것이다. 지난번 곽존중(郭存中)이 필요하지 않은 관리를 도태한 것을 담당하여, 그 봉급액이 3 천여 석에 달하였고, 그 뒤에 다만 집현전(集賢殿)과 종학(宗學)의 두 관청만을 증설하였다. 지금 들으니, 형조에서는 사무가 복잡하여 소송 사건을 제대로 다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하였다 하니, 옛 제도를 보면 6 부의 직원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다. 지금 형조의 낭관(郎官) 두 명을 증원하여 모두 8 명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비록 다른 조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소송 문제를 처결하는 사무를 도맡게 되어 편리하며 이익이 있을 것이니, 두 의정과 상의하여 보고하라."

상기의 글 두 편은 그 내용 자체보다도 정치지도자가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 면에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필요한 개혁임에도 여론 악화나 정치적 책임을 피하고자 결정을 미룬다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토론과 협상 과정은 지난하더라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에도 조선 시대 내시부의 경우처럼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과 각종 규제들이 산적해있으며, 형조의 경우처럼 행정자치부의 인력 배정 권한에 묶여 과도한 업무에 치이거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사장시키고 있는 부처들이 존재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정치는 쏟아지는 욕을 참아내면서 국사를 처리해가는 예술"이라는 김종필 전 총리의 회고는 이 대목에서 일정한 울림을 갖는다.

5.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치에의 제언

이상에서 한국 청년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보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세종 시대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 정치에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청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청년이 딛고 서있는 대지와 청년이 바라보는 지평선 너머를 직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당장 청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뿐,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길을 정비하는 게 문제 해결의 본질이다.

달리 비유하자면 서양 의학과 한방 의학의 치료요법 차이를 떠올려볼 수 있다. 서양 의학에서는 통증이 생기면 해당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만, 한방 의학에서는 증상의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하는 데 집중하듯, 청년 문제도 그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만성질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제시한 원인들이 각각 노령화, 산업구조 개편, 그리고 4 차산업혁명이었음을 기억하는 독자들은 이러한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책임 회피와 전가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여러 이해당사자가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조율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즉, 정해진 흑백프레임에 의지해서 상대를 판단하고 협상과 타협을 수치로 여기는 정치 풍토에서는 청년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일본과 중국의 사례에서도 그들이 각기 다른 형편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냉철한 현실 판단과 정책 조율을 바탕으로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가 현안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바탕으로 난맥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실록의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되,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프런티어를 개척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로또 당첨과 같은 외부적 대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부를 면밀히 살핌으로써 유능한 인재와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고질적인 문제들을 풀어내는 접근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여다보면 한국사회의 청년 문제 해결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총부양비, 즉 생산연령인구(15~64 세)가 부양해야 하는 비생산연령인구(0~14 세, 65 세 이상)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2020 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총부양비의 증가는 생산연령인구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아래 표에서 잘 드러나듯 1950 년에는 16 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했지만 오늘날에는 5 명이 같은 부담을 지고 있으며, 2036 년에는 2 명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1 명당 부양 생산인구 변동 추이 및 전망

1950 년	1997 년	2014 년	2016 년	2022 년	2027 년	2036 년
15.79 명	9.83 명	5.26 명	4.94 명	3.81 명	2.89 명	1.96 명

따라서 앞으로 3~4 년이 골든타임인 셈이다. 이 시간 동안 청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는 전기충격기로도 되살리기 어려운 코마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임금피크제, 근무시간 조정 등을 통한 일자리 쪼개기, 청년수당 등 당장 피부에 와닿는 화려한 정책으로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종처럼”이라는 말이 올림을 갖는 것은 이러한 토의와 조율의 정치를 가장 잘 운영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에도 자신이 지향하는 단단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만이 옳다고 강요하는 독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도자, 자신의 주장에 끝없이 반대논리를 내세우는 관료 내지는 정치인들의 주장도 타당하다면 수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한선 청년학포럼이 청년 문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포괄하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건전한 장으로 발전해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